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맞손'

광주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 등 10건 협의 송 지사 "지방분권 가는 큰 길 열어갈 것"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22일 민선7기 처음으로 광주에서 모여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 논의하였다.

공동정책 과제는 8건으로 ▲본격적

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강화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균특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비를 상향할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

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적극 홍보,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등이 포함되어 논의되었다.

새만금 조기 개발과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동서간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새만금~전주~김천~대구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축이 필요하며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되었던 새만금~목포 서해철도 건설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회의는 이들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지진 도지사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협력하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다함께 힘을 모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8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첫 주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손혜원 진실규명' 공은 검찰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실 규명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남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에 배당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다.

이에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친인척이 건물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유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 의원이 자신이 산 건물이 포함된 일대가 문화재에 지정되도록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 의원에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가려야 할 부분이다.

손 의원은 조카도 모르게 조카에게 1억원을 증여해 목포에서 건물 지분을 구매하도록 하고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명 매입 및 차명 재산 형성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카의 아버지이자 손 의원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건물 매입 시기에 이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가족 모두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남동생은 손 의원이 현금 증여 형식으로 돈을 건넸고, 증여세도 함께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부동산 매매에 개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이사는 손 의원의 남편이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백지신탁한 주식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신탁한 재산에 관리·운용·처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현재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서 차익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카의 명의로 건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집안 문제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며 "남동생과 이혼한 부인과 아들을 위해 제가 증여해 창성장을 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미세먼지 해결 못해 송구... 중국과 협력 강화"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재난 준비는 상황 인식 특단 대책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참모진들에게 특단의 해결책 등

을 주문하며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흑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

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인공광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두세훈 도의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아

전북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두세훈(원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두세훈 부위원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법률안감독보,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소상공인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능력을 검증받았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전북도의 직무태만을 날카롭게 지적, 법률가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드러냈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